「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4호(2020 겨울): 191-219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3 No.4 (2020 Winter)
http://dx.doi.org/10.20484/klog.23.4.8

# ISO 26000을 기반으로 한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 분석: 울산광역시 남구를 중심으로*

정 준 금

**국문요약**

이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활동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진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을 규명하고,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ISO 26000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ISO 26000이 제시하고 있는 7개 핵심과제와 36개 이슈를 중심으로 작성된 CSR Company의 SR Toolkit에 의한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권 분야를 비롯하여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보완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도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을 실증적으로 진단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사회적 책임, ISO 26000, 지방정부, CSR**

## Ⅰ.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양적 성장 우선주의는 한편으로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야기했다.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정부와 사회에 의해 전개되어 왔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보편적 문제로 등장한 지가 이미 오래 전이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가 빚어 낸 양적 팽창에 대한 폐해를 전 세계가 공감했으며, 많은 경제학자들도 양극화로 인한 사회 불안정 요소에 대하여 심각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고,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송관철, 이의연, 2018) 그래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즉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제표준화 기구(ISO: International

* 이 논문은 2019년 울산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는 ISO 26000을 제정하여 정부, 기업 등이 준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계획을 담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는 기업이 준수해야 할 10대 사회적 가치 원칙을 제시하는 등 기업과 정부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제적인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들 국제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또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등의 개념은 양적 성장 위주의 사회경제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가치 또는 사회적 책임의 개념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효율성 위주의 양적 성장보다는 지속가능성, 형평성과 분배적 측면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사회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는 당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즉 기업이 단순히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사회적으로 창출하는 성과, 사회적 가치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용어도 일반적인 의미의 사회적 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가 더 먼저 사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1] 하지만 사회적 책임은 비단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책임은 당연히 정부, 공공기관, NGO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개념이다. 그동안 이들 공공분야의 주체들은 기업과 달리 당연히 개별 기관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으로 간주되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사회적 책임 또는 사회적 가치 구현 여부에 대한 관심도 적었으며, 이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였다.

그런데 2014년 6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공공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범위, 구현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사회적 가치를 국정의 중요한 이념의 하나로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한국행정연구원, 2018) 즉 문재인 정부는 '공동체의 원리, 공익, 사회통합'과 같은 가치를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에 담아 경제의 양적 성장 패러다임 하에서 발생되는 양극화, 불평등, 고용위기, 환경파괴와 같은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달성을 국정의 중요한 이념으로 확정하였다.[2]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대표적인 공공분야인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활동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진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

1) 1953년 Howard R. Bowen이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을 발간함으로서 처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2) 이를 반영하여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 여부를 상당한 비중으로 새롭게 포함시켰다.(기획재정부, 2018)

지방정부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하위 집행기구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좌우하는 주요 정책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울산시 남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ISO26000을 중심으로 도출한 다음, 지방정부(울산시 남구)가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ISO26000이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사회적 책임의 개념

사회적 책임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Bowe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사회의 목적과 가치에 적합한 정책을 추구하고 결정하며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기업가의 의무'로 정의하였다.(Bowen, 1953) 하지만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학술적, 실무적으로 체계화되고 이론적으로 형성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3] 즉 1970년대부터 CSR은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CSR활동을 이윤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으로 변화시켰다.(Carroll, 1979; Wartick and Cochran, 1985; Wood, 1991) 1980년대에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긍정론과 이에 소극적인 부정론 간의 논쟁이 발생하였다.(김성수, 2013) 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기본이므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윤리적이라는 것이다. 후자는 기업 내지 경영자는 사회적 책임보다는 기업경영의 목적인 이익추구와 이익극대화에만 전념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은 더욱 확산되었다. 1990년대 들어 사회적 책임은 대부분의 기업들에 의해 수용되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이슈와 과제를 발굴하고 체계화 하려는 노력이 가중되었다.(김성수, 2013)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 활동에 있어서 비윤리적 행동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기업능력을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의 주요 실천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사회공헌을 강조하는 것이 전통적인 시각이라면 최근의 CSR은 '공헌(contribution)'이 아니라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즉 Coleman(1990)은 CSR을 '타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생산과 소비의 모든 기업경제의 흐름 속에서 기업의 이익이 단지 주주(shareholder) 뿐만 아니

3) 김성수(2013)는 사회적 책임의 변천과정을 자본주의가 등장한 시기부터 최근까지를 대상으로 태동기, 생성기, 성장기, 논쟁기, 정착기 등 5개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는 7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라 이해관계자(stakeholder)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송관철 외, 2018)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이기적인 성장지향 활동에 따른 지구환경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 인권의 침해, 사회적 불평등 및 격차 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 및 통제'를 반영하고 있다.(이강호, 2012)

요컨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기업이 영리행위를 하면서 파생시킨 사회적 비용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지불해야 한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초기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로부터의 압박과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기업들은 CSR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전략으로 활용하였으며, 최근에는 단순한 경영전략 차원을 넘어서 CSR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발전하였다.(김태영 외, 2017)

CSR과 관련하여 가장 알려진 학자인 Carroll(1991)은 'CSR의 4단계 책임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박애적 책임 등 피라미드 형태의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CSR 피라미드(pyramid of CSR)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경제적(economic) 책임은 기업이 생산 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조하거나(be profitable)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legal) 책임은 기업의 활동이 투명한 회계, 적합한 세금납부 등 법을 준수하면서(obey the law) 이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윤리적(ethical) 책임은 법 준수는 물론이고 환경보전, 윤리경영, 소수자 보호 등 사회적 규범, 가치를 반영하여 윤리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be ethical)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박애적(philanthropic) 책임은 보다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량한' 기업(be a good corporate citizen)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기업들이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준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윤리적, 박애적 책임까지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은 국제적으로도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기관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기업의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고, 기업활동과 사회, 경제, 환경 분야를 통합하는 시각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 1〉 국제기관의 사회적 책임 정의

| 국제기구 | 정의 |
|---|---|
| EU 집행위원회 |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 경제적 문제를 기업 활동 및 이해관계자와 상호작용에 통합하는 개념 |
|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 기업이 사회의 요구사항과 목표에 어떻게 대응하고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 |
| 세계은행 | 기업이 비즈니스 윤리에 기초하여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기업이 이해관계자,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일종의 약속 |
| OECD | 다양한 법적, 사회적, 규제적 환경 속에서 경쟁적 우위를 얻기 위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업행동 기준 및 원칙 |
| WBCSD(지속가능발전 집행위원회) | 직원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 전체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 |
| ICC(국제상공회의소) | 기업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 |
| ILO(국제노동기구) | 기업이 법적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이니셔티브이며, 기업 활동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방식 |

(자료: 고동수, 2006)

한편 2010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사회책임에 관한 국제표준(ISO26000)에서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조직이 지는 책임'으로 정의하고 있다.(ISO, 2010) 그리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은, 1) 사회의 보건 및 복지를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며, 2)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고려하며, 3) 해당되는 법을 준수하고 국제행동규범을 지키며, 4) 조직 전반에 걸쳐 통합되며 조직의 관계 속에서 실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때 사회 전체의 복지와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개념으로서, 기업은 정부, 주주, 종업원, 공급자, 고객, 경쟁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과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경영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 2. 정부의 사회적 책임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므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접근이 자발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결정 및 집행 주체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정부는 기업이 지나친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 사회가 요구하는 환경보전, 인권신장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규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인책을 제시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양자 간의 협력 관계(거버넌스)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도 한다. 정부는 사회적 책임의 이행 주체가 아니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감시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정부의 사회적 책임(GSR: governmental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논의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존재 자체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굳이 이를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고, 정부 외부에서 나타나는 기업들의 반사회적 활동을 줄이거나 제거하

는 것을 정부의 역할로 간주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첫째, 정부 스스로도 공기업, 공공기관 등과 같은 조직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기업과 소유 형태는 다르지만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책임 요소들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 순수 정부기관일지라도 인권, 환경과 같은 사회적 책임의 주요 요소들은 기업과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즉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의 추진자인 동시에 공공조직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솔선수범해야 한다.(라영재, 2009). 둘째, 정부의 이념적 지향이 때로는 사회적 책임과 상충될 수가 있다. 예컨대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조직관리는 효율성은 증대될 수 있지만 형평성 면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때 정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공공성, 사회적 가치 수준이 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될 때도 있다.(김태영 외 2017) 따라서 정부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높은 수준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창출로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논의되는 사회적 책임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 모든 조직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4]

## 3. 사회적 책임의 구성요소

그러면 과연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 이를 사회적 책임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체계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5]

### 1) GRI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이다.[6] GRI는 미국의 환경단체인 CERES(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cs)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1997년 설립되었다. GRI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보고서 기준은 2000년 G1, 2002년 G2, 2006년 G3, 2014년 G4 등 4차례에 걸쳐 발표되었으며,

4) ISO 26000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회적 책임 관련 연구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지방정부 포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공공분야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한 연구가 다수이며(윤태범, 2011; 배정환, 2011; 라영재, 2014), 최근 정부신뢰와 관련된 연구(김태영 외, 2017) 등 소수의 연구가 확인된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5) 후술하는 바와 같이 GRI, UNGC, ISO 26000 등은 분류체계와 세부 기준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 구성요소는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조직들은 이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6) '지속가능 보고서'란 기업이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뜻한다. 결국 GRI가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기준은 사회적 책임 기준을 의미한다.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일부 보완 및 개선을 하고 있다.

GRI가 제시하는 지속가능성 기준은 크게 일반적 기준(General Standards)과 주제별 특정 기준(Topic-Specific Standards)로 구분된다.[7] 전자는 100시리즈로 불리며, GRI 기준 활용을 위한 기본사항(GRI 101), 일반적 사항(GRI 102), 관리방법(GRI 103)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자는 경제(200 시리즈), 환경(300 시리즈), 사회(400 시리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들 기준들은 매우 다양한 하위 세부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 GRI 기준의 분류와 세부 지표**

| 분류 | | 세부기준 | |
|---|---|---|---|
| 일반적 기준 | | • GRI 101: Foundation 2016 | 활용방법 |
| | | • GRI 102: General Disclosures 2016 | 조직의 일반사항 |
| | | •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6 | 관리방법 |
| 특정 주제 기준 | 경제 | • GRI 201: Economic Performance 2016 | 경제적 성과 |
| | | • GRI 202: Market Presence 2016 | 시장존재 |
| | | • GRI 203: Indirect Economic Impacts 2016 | 간접적 영향 |
| | | • GRI 204: Procurement Practices 2016 | 조달 |
| | | • GRI 205: Anti-corruption 2016 | 반부패 |
| | | • GRI 206: Anti-competitive Behavior 2016 | 반경쟁 |
| | | • GRI 207: Tax 2019 | 조세 |
| | 환경 | • GRI 301: Materials 2016 | 물질 |
| | | • GRI 302: Energy 2016 | 에너지 |
| | | • GRI 303: Water and Effluents 2018 | 수질 |
| | | • GRI 304: Biodiversity 2016 | 생물다양성 |
| | | • GRI 305: Emissions 2016 | 배출물질 |
| | | • GRI 306: Effluents and Waste 2016 | 폐기물 |
| | | • GRI 307: Environmental Compliance 2016 | 환경순응 |
| | | • GRI 308: Supplier Environmental Assessment 2016 | 환경평가 |
| | 사회 | • GRI 401: Employment 2016 | 고용 |
| | | • GRI 402: Labor/Management Relations 2016 | 노사관계 |
| | | • GRI 403: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2018 | 건강과 안전 |
| | | • GRI 404: Training and Education 2016 | 교육 훈련 |
| | | • GRI 405: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2016 | 공정기회 |
| | | • GRI 406: Non-discrimination 2016 | 차별금지 |
| | | • GRI 407: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2016 | 결사의 자유와 공동협상 |
| | | • GRI 408: Child Labor 2016 | 아동노동 |
| | | • GRI 409: Forced or Compulsory Labor 2016 | 강제노동 |
| | | • GRI 410: Security Practices 2016 | 안전 |
| | | • GRI 411: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2016 | 토착민의 권리 |
| | | • GRI 412: Human Rights Assessment 2016 | 인권평가 |
| | | • GRI 413: Local Communities 2016 | 지역사회 |
| | | • GRI 414: Supplier Social Assessment 2016 | 사회적 평가 |
| | | • GRI 415: Public Policy 2016 | 공공정책 |
| | | • GRI 416: Customer Health and Safety 2016 | 소비자 안전 |
| | | • GRI 417: Marketing and Labeling 2016 | 마켓팅 |
| | | • GRI 418: Customer Privacy 2016 | 소비자정책 |
| | | • GRI 419: Socioeconomic Compliance 2016 | 사회경제적 순응 |

(자료: www.globalreporting.org, 세부기준 뒤의 연도는 기준이 확정된 시기를 의미한다)

7) www.globalreporting.org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GRI는 조직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과 경제, 환경, 사회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기준을 준수하면 조직의 지속가능성 목표가 달성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사회적 책임이 완수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GRI는 지속가능성을 사회적 책임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GRI 기준은 특히 환경문제와 노동이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송관철, 이의연, 2018)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GRI 기준에 의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 2) UNGC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는 기업들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여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8]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0년에 발족된 유엔 산하 기구이다. UNGC는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 분야에서의 기업전략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상향시키고자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을 협약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UNGC는 선언적인 의미의 10대 원칙만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원칙별로, 이 원칙을 준수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 평가사항들을 매우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들 원칙과 세부기준에 따라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함으로써 UNGC가 정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UNGC가 제시한 10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표 3〉 UNGC의 10대 원칙**

| 분야 | 원칙 |
|---|---|
| 인권 |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br>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 노동 | 원칙 3: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한다.<br>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br>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한다. |
| 환경 | 원칙 7: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br>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br>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 반부패 |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

(자료: www.unglobalcompact.org)

UNGC는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세계적 운동을 동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을 포함하는 10대 원칙에 의거하여 기업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토록 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 간의 협력과 혁신을

8) UNGC는 no poverty, zero hunger, good health and wellbeing 등을 비롯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송관철, 이의연, 2018)

### 3) ISO 26000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10년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표준을 ISO 26000으로 제정·발표하였다. 이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이 의사결정 및 활동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7개 핵심주제와 37개 주요 이슈별로 조직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회적 책임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ISO 26000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분석하는 만큼 ISO 26000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보다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 Ⅲ. ISO 26000의 주요내용

## 1. ISO 26000의 특징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의 표준규범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국의 상이한 CSR 표준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ISO9000(품질경영), 14000(환경경영)과 같은 시스템 표준 형식으로 사회적 책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ISO26000 사회적 책임 표준을 만들기 위한 1차 총회는 2005년 3월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개최되었다. 그 후 표준 초안 작성, 의견수렴, 표준안 수정 등을 위한 수차례의 총회를 거쳐 2010년 2월 ISO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표준안이 확정되었다.

ISO 26000은 사회의 모든 조직이나 기업이 의사결정 및 활동 등을 할 때 소속된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산업계, 정부, 소비자, 노동계, 비정부기구(NGO) 등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등 7대 주제를 사회적 책임 이슈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지침과 권고사항 등을 담고 있다.

ISO 26000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의 ISO 9001이나 ISO 14001과는 달리 인증을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즉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일종의 안내서로서 조직은 ISO 26000의 규격을 참조하여 자주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ISO 26000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자체 규격을 만들어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어 ISO 26000도 점차 인증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9] 둘째,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나 NGO 등 모든 형태의 조직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CSR'에서 기업을 뜻하는 'C'를 뺀 사회적 책임(SR)으로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 결과 ISO 26000은 다른 규격에 비해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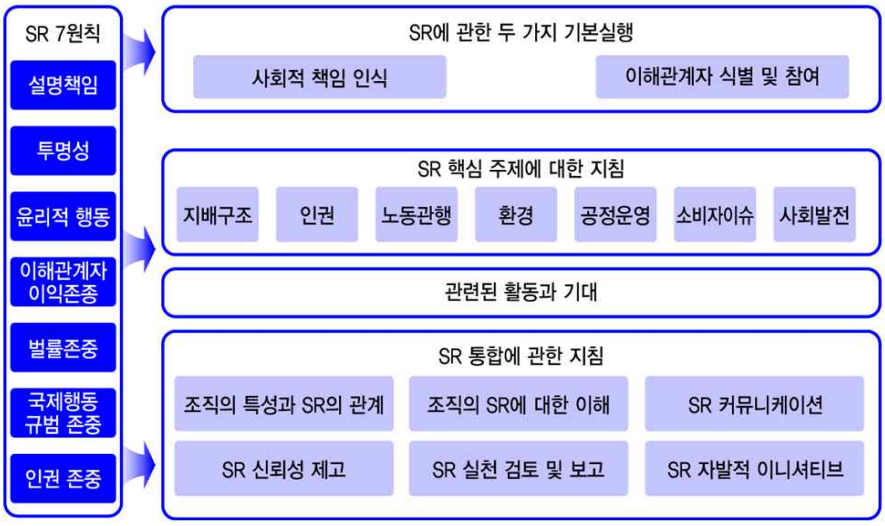
9)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는 ISO 26000을 반영하여 'ONR 192500:2011 SR'을 제정하였으며, 오스트리아 표준협회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직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데 있어서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다. 셋째, 규격의 제정과정에 다수의 참여자가 관여하였다. 즉 정부, 기업, 노동자, 소비자, NGO, 기타관련자 등 6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하여 만든 규격이다.[10)]

## 2. ISO 26000의 구조와 원칙

ISO26000(SR)은 크게 7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2, 3장은 적용범위와 용어 및 정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장은 사회적 책임을 위한 7개 원칙을 밝히고 있다. 5장은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6장에서는 지배구조,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이슈, 사회참여 및 발전 등 7개 핵심주제 및 이슈별로 기대사항을 정리하고, 7장은 이행수단과 방법론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다.

〈그림 1〉 ISO 26000 구조




ISO 26000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위한 7개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술표준원, 2012) 첫째, 설명책임 원칙은 조직이 적절한 감시를 수용하고 이 감시에 대응할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둘째, 투명성 원칙은, 조직은 명백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방식과 합리적이고 충분한 정도로, 조직의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알려진 영향 및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직이 책임지는 정책, 의사결정 및 활동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윤리적 행동원칙은, 조직의 행동은 정직성, 평등성 및 진실성(integrity)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이해관계자 이해존중 원칙은, 조직은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고려하며,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직의 소유자, 회원, 고객 또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다른 개

10) 규격의 제정 작업에 99개국, 42개 국제기관, 45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이강호, 2012)

인 또는 그룹도 조직의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다섯째, 법률존중 원칙은, 조직은 법치 존중이 의무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치란 법의 우위, 특히 어떠한 개인 또는 조직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정부 역시 법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말한다. 여섯째, 국제규범 준수 원칙은, 조직은 법치 존중 원칙을 지키면서 국제행동규범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째, 인권존중 원칙은, 조직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의 중요성 및 보편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ISO 26000의 핵심주제 및 이슈

ISO 26000은 6장에서 7개의 핵심 주제와 36개의 이슈를 사회적 책임의 규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7개 핵심주제는 지배구조,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이슈, 사회참여 및 발전 등으로서, 이 내용이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ISO 26000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7개의 이슈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이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1)]

**〈표 4〉 ISO 26000의 핵심주제와 이슈**

| 핵심주제 | 이슈 항목 |
|---|---|
| 1. 조직 거버넌스 | |
| 2. 인권 | 이슈1 실사, 이슈2 인권리스크 상황, 이슈3 연루/공모회피<br>이슈4 고충처리, 이슈5 차별 및 취약집단, 이슈6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br>이슈7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이슈8 근로에서의 근본원칙 및 권리 |
| 3. 노동 | 이슈1 고용 및 고용관계, 이슈2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이슈3 사회적 대화, 이슈4 근로에서의 보건 및 안전, 이슈5 작업장에서의 인적 개발 및 훈련 |
| 4. 환경 | 이슈1 오염예방, 이슈2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이슈3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이슈4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
| 5. 공정운영 | 이슈1 반부패, 이슈2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이슈3 공정 경쟁,<br>이슈4 가치사슬에서의 사회적 책임, 이슈5 재산권 존중 |
| 6. 소비자 | 이슈1 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편중되지 않은 정보 및 공정계약<br>이슈2 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 이슈3 지속가능 소비,<br>이슈4 소비자서비스 지원과 불만 및 분쟁 해결,<br>이슈5 소비자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이슈6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br>이슈7 교육 및 인식 |
| 7.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 이슈1 지역사회 참여, 이슈2 교육 및 문화, 이슈3 고용창출 및 기능개발,<br>이슈4 기술개발 및 기술접근성, 이슈5 부 및 소득 창출, 이슈6 건강,<br>이슈7, 사회적 투자 |

첫째, 조직 거버넌스(organizational governance)는 조직이 조직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규정된 구조와 프로세스에 기반한 공식적 거버넌스 메커니즘 및 조직의 문화 및 가치에 연계되어 나타나는 비공식적 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 조직 거버넌스는 조직 내 의사결정의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모든 조직의 핵심 기능이며, 거

11) 이하의 내용은 주로 기술표준원(2012)을 참고하였음

버넌스 시스템은 조직의 규모 및 유형, 조직이 운영되는 환경, 경제, 정치, 문화 및 사회 맥락에 따라 다양하다. 조직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슈로서는 사회적 책임의 원칙 및 관행의 활용을 촉진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구조'를 제시하고, 조직에 요구되는 활동으로 ① 사회적 책임에의 헌신을 표명하는 전략의 개발, ② 리더십의 의지 및 설명책임의 표명, ③ 사회적 책임의 성과와 관련된 인센티브의 제공 등 12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둘째, 인권(human right)은 모든 인간이 부여받은 기본권이며, 인권에는 두 가지의 넓은 범주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하나는, 생명권, 자유권, 법 앞에서의 평등 및 표현의 자유 같은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권, 식량권, 최상 보건기준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같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이다. 또한 인권은 고유하고, 양도할 수 없고, 보편적이고, 분할할 수 없으며 상호의존적인 것이라는 5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이 인권 관련 고려할 내용으로서 ① 조직은 모든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으며, ② 조직이 인권존중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의가 필요하며, ③ 조직은 인권에 관해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인권과 관련된 8가지 이슈로는 ① 실사, ② 인권에 관한 리스크 상황, ③ 연루 및 공모의 회피, ④ 고충해결, ⑤ 차별 및 사회적 약자, ⑥ 시민 및 정치적 권리, ⑦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⑧ 근로에서의 기본적 원칙 및 권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조직의 노동관행(labour practices)은 하청근로를 포함하여, 조직 내에서 수행되는 근로와 관련된 모든 정책 및 관행을 포함하며, 조직에 직접 고용된 피고용인 및 조직의 관계, 조직이 소유 또는 직접적인 통제권을 가지는 작업장에서 조직이 갖는 책임 그 이상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관행은 근로자의 채용 및 승진, 징계 및 고충 처리 절차, 근로자의 전근 및 재배치, 고용의 만료, 훈련 및 기능 개발, 보건, 안전 및 산업 위생, 특정 근로 시간 및 보수 같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노동관행은 고용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다루기 위한 단체교섭, 사회적 대화 및 노사정 협의에 근로자 조직의 인정, 근로자 및 사용자 조직 양쪽의 의견 및 참여를 포함한다. 노동과 관련된 이슈로는 ① 고용 및 고용관계, ②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③ 사회적 대화, ④ 근로에서의 안전보건, ⑤ 작업장에서의 인적개발 및 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조직이 어디에 위치해 있든,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은 환경에 항상 영향을 미치므로, 환경(environment)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조직은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의 직접적·간접적인 경제적, 사회적, 보건적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통합 접근방식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직은 환경적 책임, 예방적 접근방식, 환경리스크 관리, 오염자 부담 등 4개 원칙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과 관련된 이슈로는, ① 오염 예방, ②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③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④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공정 운영(fair operating practices)은 조직이 다른 조직을 다룰 때 윤리적 행동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조직 및 조직의 파트너, 공급자, 계약자, 고객, 경쟁자 및 조직이 속한 협회뿐만 아니라 조직 및 정부기관 간의 관계도 포함한다. 공정 운영관행 이슈는 반부패, 공공 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참여, 공정 경쟁,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 다른 조직과의 관계 및 재산권 존중에서 발생한다. 공정한 사업관행에 관련된 원칙으로서, 법치 존중, 윤리적인 행동기준 준수,

설명책임 및 투명성 등이 모든 공정한 사업관행의 기초를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된 이슈로 ① 반부패, ②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③ 공정 경쟁, ④ 가치사슬에서 사회적 책임, ⑤ 재산권의 존중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소비자 이슈(consumer issues)로서, 다른 고객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그 소비자 및 고객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조직의 책임 속에는 구체적으로 교육 및 정확한 정보 제공, 공정하고 투명하며 도움이 되는 마케팅 정보 및 계약 프로세스의 이용, 지속가능소비 촉진, 모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고, 적절한 경우, 취약 및 불리한(disadvantaged) 자의 요구에 맞춘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조직은 안전, 정보접근, 선택, 의견청취, 피해구제, 교육, 건전한 생활환경 등 7가지의 소비자 니즈(needs)를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관련 이슈로는, ① 공정한 마케팅, 사실적이고 편중되지 않은 정보 및 공정 계약 관행, ②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③ 지속가능한 소비, ④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불만 및 분쟁의 해결, ⑤ 소비자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⑥ 필수서비스에 대한 접근, ⑦ 교육 및 의식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곱째,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으로서, 지역사회는 조직의 현장에 물리적으로 근접하고 또는 조직의 영향 영역 내의 지리적 영역에 위치한 주거지(residential) 또는 기타 사회적 정착지(social settlements)를 의미한다. 조직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참여에 토대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 참여는 시민사회를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 기관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조직은 민주적 및 시민적 가치를 반영하고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은 둘 다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사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조직이 그 지역사회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조직의 기여는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지역사회에서 더 높은 수준의 안녕을 촉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과 관련된 이슈로는, ① 지역사회 참여, ② 교육 및 문화, ③ 고용창출 및 기능개발, ④ 기술 개발 및 기술의 접근성, ⑤ 부 및 소득 창출, ⑥ 건강, ⑦ 사회적 투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 3. ISO 26000을 기반으로 한 지방정부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내용: 분석틀

이상과 같이 ISO 26000에서는 7개 핵심주제별로 36개의 이슈를 제시하고 각 이슈별로 조직이 사회적 책임들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거나 준수해야 할 활동과 기대사항들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ISO 26000 주요 내용은 기업, 정부, NGO 등 성격을 달리하는 조직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이들 내용을 그대로 지방정부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핵심주제의 하나인 '소비자'의 경우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쉽게 식별 가능하지만,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수요자들을 '소비자'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지역사회의 참여 및 발전' 주제도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근본적인 역할이므로 기업이나 NGO 같은 비정부 조직과는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ISO 26000에서 제시하는 36개 이슈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이러한 차이가 무수히 나타난다. 따라서 ISO 26000을 지방정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ISO 26000을 지방정부에 맞게 '재해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ISO 26000의 7대 핵심주제와 36개 이슈에 포함된 준거와 규격들을 지방정부라는 조직의 특성에 맞춰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음 〈표 5〉는 이를 정리한 것이며,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분석하는 분석틀이 될 것이다.[12] 즉 지방정부가 다음 표의 요소들을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면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ISO 26000을 기반으로 한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세부내용**

| 핵심 주제와 쟁점 | 지방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
|---|---|
| [핵심주제 1] 조직 거버넌스 | |
| 핵심주제 1: 조직 거버넌스 | - 사회적 책임 관련 조례제정<br>- 기관장의 주요 정책방향 또는 주요공약에 사회적 책임 포함<br>-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 효율적 세무행정<br>- 사회적 책임 달성 성과 인사 및 예산 반영<br>- 고위직 여성비율 제고<br>- 내부구성원 및 주민들과의 의사소통 채널 구축 및 소통활동 강화<br>-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 [핵심주제 2] 인권 | |
| 쟁점 1: 실사 | - 전반적인 인권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는 인권조례의 제정<br>- '인권 영향평가' 시행<br>- 인권정책을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독립된 조직 설치 |
| 쟁점 2: 인권 위험상황 | - 독립적인 인권영향평가 실시<br>-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최소화를 위한 조치 마련 |
| 쟁점 3: 공모회피 | - 대민접촉 담당직원들의 인권침해 가능성 최소화 노력.<br>- 인권침해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시행<br>-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시 단체의 인권관리 노력 여부를 반영<br>- 계약 체결 시 해당 단체(기업)의 인권 침해 여부 반영<br>- 인권선언<br>- 반사회적(반인권적 또는 인권 침해) 활동을 수행한 단체와의 관계 단절 |
| 쟁점 4: 고충처리 | - 합리적이고 투명한 민원처리 방식 구축<br>- 직원 고충처리 제도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 |
| 쟁점 5: 차별과 취약그룹 | - '차별금지 조례' 제정 등으로 차별금지의 법적, 제도적 장치 구축<br>- 차별 여부 파악을 위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 및 정책반영 시스템 구축<br>- 여성, 장애인, 아동, 다문화 가정(이주자), 소수인종, 노인, 난민 등 소수집단의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정책 수립 |
| 쟁점 6: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 -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br>- 내부고발자 보호정책<br>- 직원 징계절차의 민주성 및 징계를 이유로 한 부당한 처벌 금지 |

12) 〈표5〉의 내용은 잠정적이며 추후 연구를 통한 수정·보완으로 더욱 정교화 되기를 기대한다.

| | |
|---|---|
| 쟁점 7: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 여부(또는 향유정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 결과를 정책에 반영<br>- 지방정부의 정책활동이 권리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정책 반영<br>-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에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정한 공급<br>- 공익서비스 요금의 합리적인 결정<br>-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 받을 권리 보장 |
| 쟁점 8: 근로의 근본원칙과 권리 | - 공무원 노조의 결성, 활동 편의 제공 및 교섭권 보장<br>- 인사관리의 공정성(차별 금지)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구축<br>- 사회적 약자(장애인, 여성, 청년, 고령근로자 등)의 고용기회 확대 |
| [핵심주제 3] 노동관행 | |
| 쟁점 1: 고용과 고용관계 | - 임시직, 비정규직의 과도한 활용 제한<br>- 근로자 차별 금지<br>- 근로자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스 보장<br>- 용역계약, 조달 업체 선정 기준에 고용관계에 대한 관점을 포함 |
| 쟁점 2: 근로 조건과 사회적 보호 | -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로 노동조건에 대한 구속력 확보<br>-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마련<br>- 적정 임금 수준 확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br>- 근로시간 준수 및 주휴 및 연차휴가, 출산 휴가 제공, 보육시설 마련<br>-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 |
| 쟁점 3: 사회적 대화 | -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br>- 노조대표의 적법한 활동 보장 및 지원<br>- 사회적 대화 기구 조성 및 참여 |
| 쟁점 4: 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 | - 산업안전 및 보건 정책 개발 유지<br>- 직원들의 보건 및 안전 리스크 분석 및 통제<br>- 안전장비 제공, 보건 안전 문제에 대한 기록과 조사<br>- 임시직, 비정규직, 하청직 등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안전 보건정책 적용<br>- 안전 및 보건 훈련 시행 |
| 쟁점 5: 직장에서의 인적 개발과 훈련 | -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br>- 퇴직자 교육 |
| [핵심주제 4] 환경 | |
| 쟁점 1: 오염 방지 | - 분야별 환경오염예방 정책 마련<br>- 유해 독성 물질 등 환경오염 정보의 공개<br>- 환경사고 예방 및 대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비상사태 대비 계획 마련 |
| 쟁점 2: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 - 지역 내 자원 사용량 측정 및 기록, 보고 체제 수립<br>-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자원 사용 확대<br>- 재활용율 극대화 정책<br>- 지속가능한 조달 행정 |
| 쟁점 3: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 -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저감 정책<br>- 에너지 효율성 증대 정책 및 온실가스 저감을 고려한 에너지정책 수립<br>- 에너지절약 정책<br>-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br>- 지역 내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
| 쟁점 4: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br>- 자연서식지, 습지, 산림 등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종합 전략 수립<br>- 멸종위기 종 보호를 위한 정책<br>-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철저한 활용<br>-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
| [핵심주제 5] 공정 운영관행 | |
| 쟁점 1: 반부패 | - 부패방지 정책 수립 및 기관장의 의지 표명<br>- 부패방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 | |
|---|---|
| | -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br>- 외부기관의 부패방지 활동 장려 가능한 제도 도입 |
| 쟁점 2: 책임있는 정치 참여 |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br>-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쟁점 3: 공정 경쟁 | - 투명하고 공개적인 입찰제도<br>- 공정경쟁에 관한 교육 실시<br>- 반경쟁적 기업과 기관 보조금 지원 대상 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 |
| 쟁점 4: 가치사슬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 - 조달 및 계약 기준 내에 사회적 가치 기준 포함<br>- 관내 기업과 조직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시행 여부 실사 및 모니터링<br>- 관내 기업과 조직들이 사회적 책임 시행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br>-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 쟁점 5: 재산권 존중 | - 주민들의 재산권 존중 및 공정한 보상<br>- 기관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 시 사회적 가치 고려 |
| [핵심주제 6] 소비자 이슈 | |
| 쟁점 1: 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치우치지 않은 정보와 공정 계약 관행 | - 공정하고 정확한 행정정보 제공 및 투명한 공개<br>- 성·종교·인종 등과 관련한 차별적 홍보 금지<br>- 주민들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홍보<br>- 책임회피성 홍보, 일방적 홍보 등 지양 |
| 쟁점 2: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보호 | - 주민 안전대책 수립 (재난대비, 교통안전, 범죄로부터 보호 등)<br>- 소비자 안전 및 보건 관련 민원처리 정책 마련 (조직 및 예산)<br>- 안전정보의 투명하고 정확한 공개<br>- 주민 안전 훈련 및 교육 실시 |
| 쟁점 3: 지속가능소비 | -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소비 교육 실시<br>- 기업이나 단체가 지속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br>-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지원, 계약 등에서 우대<br>- 지속가능한 소비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br>- 재화나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공개 |
| 쟁점 4: 소비자 서비스지원 및 불만과 분쟁 해결 | - 행정활동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 마련<br>- 행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와 방법 마련<br>- 소비자불만 해소를 위한 신고, 처리 등의 업무 수행 |
| 쟁점 5: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 - 주민 정보보호 대책 수립<br>- 공정하고 합법적인 정보수집 및 주민 동의 없는 데이터 활용 금지<br>- 개인 데이터 내용 확인 및 수정 또는 삭제 청구권 보장<br>- 주민정보 관리부서 및 책임자 공개, 전문가 확보 |
| 쟁점6: 필수서비스에 대한 접근 | - 구청이 제공하는 필수서비스의 이용권 보장<br>- 주민이 부담하는 요금 책정 시 정확한 정보제공 및 투명성 확보<br>- 필수서비스 제공 시 차별 금지 |
| 쟁점 7: 교육과 인식 | - 소비자교육 |
| [핵심주제 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 |
| 쟁점 1: 지역사회 참여 | - 지역사회 관련 사업 시행 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그룹 참여 보장<br>- 참여자와 투명한 관계 유지 |
| 쟁점 2: 교육과 문화 | - 지방정부의 주민대상 교육활동(평생교육 프로그램 포함)에 다음 사항 포함<br>1) 지역지식 촉진<br>2) 취약그룹 학습기회 촉진<br>3) 문화활동 지원, 문화유산 보호 및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및 기술 활용 |
| 쟁점 3: 고용 창출과 기능 개발 | -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 정책(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 또는 기술 보급)<br>- 지방정부 및 국가의 기능개발 프로그램의 확대<br>- 민간의 고용창출 활동 지원 정책 |

| | |
|---|---|
| 쟁점 4: 기술 개발과 접근성 | -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개발 사업 또는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br>- 관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기술개발 및 지역주민의 고용 확대<br>- 지역 내에 기술이전 및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 |
| 쟁점 5: 부와 소득 창출 | - 조달, 계약 및 공사발주에 있어서 지역 기업 우대 정책<br>-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br>-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취약 조직에 대한 지원 정책<br>- 지역 시장(전통시장) 등 지원<br>-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공회의소 등 사업자단체에 대한 지원 |
| 쟁점 6: 보건 | - 행정활동이 지역주민의 보건에 미치는 영향 파악<br>- 질병예방, 영양관리, 의료서비스 및 위생 향상 프로그램<br>- 지역주민 운동능력 향상 프로그램 |
| 쟁점 7: 사회적 투자 | - 지역 내 기업, 시민단체 등과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적 투자활동 전개<br>-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투자 강화 |

# Ⅳ.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 분석: 울산시 남구를 중심으로[13)]

## 1. 분석방법

ISO 26000을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적용하기 위해 재해석한 내용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남구에서 2018년 시행한 주요 정책 105개와 35개의 추가 사업 등 총 140개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였다. 105개 정책은 '2018년 구정 주요 업무계획'을 참고하였으며, 추가 정책은 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확보하였다.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분석은 사회적 책임 컨설팅 및 인증분야의 세계적인 기관인 CSR Company[14)]의 SR Toolkit을 사용하였다. SR Toolkit은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해 취해진 조치 및 기대와 관련하여 각 조직의 활동을 평가하는 일련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ISO 26000 표준구조를 바탕으로 각 조직의 사회적 책임활동 상태를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책임 전략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Toolkit에는 전체적으로 313개의 핵심 고려 사항(consideration)이 있으며, 각각의 고려사항을 통하여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평가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도로 훈련되고 자격을 갖춘 평가원에 의해서 이뤄진다.[15)]

SR Toolkit의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는 관련성, 중요성, 성과점수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13) 이 장의 내용은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2019)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14) ISO26000 규격 제정위원장을 역임한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Martin Neureiter 교수가 설립한 기관으로서 오스트리아 표준협회와 공동으로 ISO26000 인증활동을 수행하는, 이 분야 대표기관이다.

15) 울산광역시 남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평가는 심사평가 자격을 갖춘 전문 심사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오스트리아 CSR Company의 대표인 M. Neureiter 교수의 감수와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째, 관련성(relevance) 점수는 0에서 5까지의 점수를 사용하여 등급이 매겨지는데, 조직에 주요 고려 사항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환경'의 핵심 이슈인 '자연 서식지의 환경, 생물 다양성 및 복원 보호'에 대한 항목 하에 있는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고려할 때, 건설 회사의 경우가 일반서비스 회사보다 관련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 지자체를 예로 들면 소비자 이슈에서 '소비자 정보제공(남구 주민들에게 정책과 행정정보 제공)'은 지자체 본연의 활동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일반기업 또는 NGO 조직보다 관련성 점수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고려사항에 대한 중요성(significance) 또한 0에서 5까지의 점수를 사용하여 등급이 매겨지며, 이 역시 조직의 특성에 따라 각 고려사항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결정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과 점수(performance grade)는 특정 이슈에서 조직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성과 등급(Grade) 역시 1에서 5까지의 숫자로 나타난다.(1: Very bad, 2: Bad, 3: Neutral, 4: Good, 5: Very good) 핵심 주제별로 울산광역시 남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2. 분석결과

### 1) 조직 거버넌스

남구의 조직 거버넌스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윤리 프로그램, 위험 관리, 이해관계자 참여 등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개선 필요성이 도출되었는데, 의사전달 과정과 절차를 시스템화하지 못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전달 채널이 제대로 인지되지 못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년 5월 현재, 5급 이상 여성이 3명으로 전체(37명)의 8.1%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성관리직 비율을 좀 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고, 중요의사결정을 하는 각종 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구청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법규 및 윤리적 행동규범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윤리적 행동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의 제도와 문화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들은 특별히 보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는 대부분 국민들에서 공개되며, 지방의회, 여론, 언론 등의 감독과 감시를 받는 지방정부의 특성 상 투명성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남구 역시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인권

인권분야는 기관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 등 외부인이 받는 인권문제와 내부 직원의 인권문제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남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내·외부적으로 중요한 인권 쟁점은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인권경영시스템은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향후 인권 관련 이슈들에 대해 가시적인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지속적인 인권 분야 모니터링을 통해 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권분야의 주요 점검 사항인,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 점검하는 시스템, 직·간접적 및 무언의 공모(인권남용에 고의적으로 상당히 개입되는 상황)를 적극 회피하는 절차의 수립, 조직 내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치유 메커니즘 수립, 특히 인권 취약그룹(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의 인권침해 예방 등의 면에서 체계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인권실사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의 경우, 2013년 인권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2017년 인권증진기본계획(2018-2022)이 수립되었지만, 형식적인 계획에 머물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 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인권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인권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공모회피 분야에서는, 공모의 개념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간접 공모가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고충처리, 차별과 취약그룹,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 근로원칙 등의 분야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노동

노동 분야는, 노동과 관련된 의미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고, 국내 노동관련 법규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 분야에서 양호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다만 보수 분야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크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고용 및 고용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 관련 문제는 사회복지적 차원의 접근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적 차원의 접근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남구의 일자리 정책은 사회복지적, 행정편의적, 예산의 적법사용에 중점을 두고 집행되고 있어서 경제성이 다소 소홀해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와 관련된 분야는 국내 노동 및 고용 관련 법안이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져 있는 편이고, 중앙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의 추진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사회적 대화 분야는 노사 간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이 실행되고 있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근로에서의 보건 및 안전 분야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획득 하는 등 양호한 수준이며,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서 작업장에서의 인적 개발 및 훈련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환경

전반적으로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전 노력을 충실히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청 홈페이지 등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주요사업 항목에 환경 관련 내용들이 다수 빠져 있는 것은 환경보전의 상대적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환경분야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만큼 환경이슈들의 중요성을 보다 높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구의 경우 공단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인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이슈들이 파급, 확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협력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활동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환경보고서 작성이 요구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오염예방 분야와 관련하여, 수질, 대기, 폐기물 관리는 환경 분야에서 기본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구의 주요사업 계획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위해 남구 지역에 해당하는 에너지, 물, 자원의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디자인 분야, 환경경영시스템 연계 분야, 지속가능한 숲 관리 정책 등에서 개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셋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관리가 중요한 정책과제인데, 저탄소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많지만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체적인 비전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관련하여, 두루미생태환경연구소 건립 등 생태계 보전 노력은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울산대공원, 태화강 인근 지역의 친환경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분야에서는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진단되었다.

### 5) 공정운영

전반적으로 남구의 공정운영 관행 분야는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구와 협력하는 기업 또는 위탁업체 등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반부패에 대한 보고 및 처리 프로세스는 잘 정립되어 있다. 또한 반부패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제고 노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반부패 제도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둘째, 책임 있는 정치 참여를 위해 선거개입 금지, 정치적 중립 훼손방지 등 남구 구성원의 책임 있는 정치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잘 정립되어 있다. 셋째, 공정경쟁 관련하여, 조달 사업에서 공정한 경쟁 이행을 위한 제도가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기업을 보호하는 활동도 이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공정경쟁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분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의 사회적 책임 촉진을 위해서는 남구청 조달 기업 또는 위탁기관들이 사회적 책임 활동에 동참하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과 공유재산 관리 등 재산권 존중을 위한 여러 정책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소비자

남구는 다양한 채널과 도구를 통하여 정확한 행정정보를 세밀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구민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계획과 활동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구민 대상의 지속가능 소비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교육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첫째, 공정 마케팅 분야를 보면, 남구는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제도를 통해 주요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 요소를 식별하고 재난 대비를 위한 방안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활동으로 인한 안전위협에 대한 대책을 잘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셋째, 지속가능소비를 위해 재활용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환경개선 이행 및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 해결을 위해 여러 부서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고객 정보 보호 또한 관련 전문가의 주도 아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는 통합로그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사이버 침해에 대한 실시간 탐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공공요금 긴급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계층에게 일시적으로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어린이 급식, 음식문화개선 등 다양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지역사회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분야의 각 이슈별 중요성과 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울산 남구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첫째, 지역사회 참여를 보면, 남구의 경우 서비스 및 재화를 분배하는 과정의 구조적인 차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매우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 사회서비스, 제도적인 발전 등 대부분의 항목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소수자와 여성의 발전을 지원하는 노력, 다양한 방법과 기준을 활용하여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 지역의 조직뿐만 아니라 전국 및 국제적인 조직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진단되었다. 둘째, 교육 및 문화와 관련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훈련, 적절한 교육 훈련 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경력 개발, 지역의 문화 유산에 대한 보호 활동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고용창출 및 기능 개발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부의 창출 등을 통해 고용창출 및 기능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인적자원 개발 및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은 보통 수준으로 진단되었다. 넷째, 부 및 소득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노력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기술 개발 및 기술 접근성, 보건,

사회적 투자 분야는 모든 항목에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3. 분석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지방정부(울산시 남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을 평가해 본 결과, 전반적인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부이슈 중 미흡과 보통 수준이 일부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7개 핵심과제 중 인권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진단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대부분의 지방정부 고유업무 자체가 ISO 26000의 표준 규격에 포함된 사회적 책임 요소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지방정부는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과는 달리 평소의 업무 수행 자체가 사회적 책임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굳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또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국회, 지방의회, 감사원, 언론, 여론 등 외부 기관의 감독과 감시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외부의 개입은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도 발견되었다. 이를 핵심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거버넌스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기관장의 의지 표명과 전담부서의 설치를 통해 조직의 모든 정책활동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체계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에 반영하고, 예산 등 자원관리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확대하며,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인권 존중을 위해, 우선 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기초조사를 시행해야 하며, 주기적인 실사프로세스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의 갈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인권 리스크 상황을 가정하여 이에 대비하는 조치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정, 노인, 난민 등 일부집단의 인권 및 차별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과정을 확립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노동 분야에서는, 우선 고용확대를 위해서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일자리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단기 실적확보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하나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자원부족이라는 한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나친 확대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실 있는 수행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 분석결과

| 핵심주제 | 이슈 | 세부내용 | 이행수준 |
|---|---|---|---|
| 1. 조직 거버넌스 | | | 양호 |
| 2. 인권 | 이슈1 | 실사 | 미흡 |
| | 이슈2 | 인권리스크 상황 | 보통 |
| | 이슈3 | 연루/공모회피 | 미흡 |
| | 이슈4 | 고충처리 | 양호 |
| | 이슈5 | 차별 및 취약집단 | 양호 |
| | 이슈6 |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 | 양호 |
| | 이슈7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양호 |
| | 이슈8 | 근로에서의 근본원칙 및 권리 | 양호 |
| 3. 노동 | 이슈1 | 고용 및 고용관계 | 양호 |
| | 이슈2 |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 양호 |
| | 이슈3 | 사회적 대화 | 양호 |
| | 이슈4 | 근로에서의 보건 및 안전 | 양호 |
| | 이슈5 | 작업장에서의 인적 개발 및 훈련 | 양호 |
| 4. 환경 | 이슈1 | 오염예방 | 양호 |
| | 이슈2 |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 보통 |
| | 이슈3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 보통 |
| | 이슈4 |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 양호 |
| 5. 공정운영 | 이슈1 | 반부패 | 양호 |
| | 이슈2 |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 양호 |
| | 이슈3 | 공정 경쟁 | 양호 |
| | 이슈4 | 가치사슬에서의 사회적 책임 | 보통 |
| | 이슈5 | 재산권 존중 | 양호 |
| 6. 소비자 | 이슈1 | 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편중되지 않은 정보 및 공정계약 | 양호 |
| | 이슈2 | 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 | 양호 |
| | 이슈3 | 지속가능 소비 | 양호 |
| | 이슈4 | 소비자서비스 지원과 불만 및 분쟁 해결 | 양호 |
| | 이슈5 | 소비자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 양호 |
| | 이슈6 |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 양호 |
| | 이슈7 | 교육 및 인식 | 보통 |
| 7.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 이슈1 | 지역사회 참여 | 양호 |
| | 이슈2 | 교육 및 문화 | 양호 |
| | 이슈3 | 고용창출 및 기능개발 | 양호 |
| | 이슈4 | 기술개발 및 기술접근성 | 양호 |
| | 이슈5 | 부 및 소득 창출 | 양호 |
| | 이슈6 | 건강 | 양호 |
| | 이슈7 | 사회적 투자 | 양호 |

넷째, 환경분야에서는, 지역 차원에서의 오염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과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중대 오염 발생원, 물 소비, 폐기물 발생 및 에너지 사용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측정, 기록, 보고하는 시스템과 프로세스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물론,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정운영 분야에서는 우선 부패방지를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지방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명예감사관의 선발을 보다 전문화 하고 이들의 역할을 감사 참여, 일반감사 참관 및 의견제시, 공직자의 부정부패 감시, 공직자의 청렴도 모니터링, 구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 등 여론 수집 및 제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경쟁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들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조달 및 구매행정 활동을 통해 다른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치사슬에 따른 리더십 및 멘토링 등을 통해, 외부 기관들의 사회적 책임 원칙의 수용을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정부가 다른 조직 또는 위탁기관 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을 고려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섯째, 소비자 분야에서는,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민자들의 자조모임과 다문화가족 배우자 모임 등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 안전 관련하여, 고령자, 장애우 등 교통약자를 위해 무장애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등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교환 및 정보의 공개와 제공 등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분야에서는, 우선 지방정부마다 주민들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형식적인 면에서는 참여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영향력 면에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참여를 위해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과 인력에 비해 어느 정도의 성과가 확인되고 있는지, 비용 대비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된 효과는 일시적인 효과인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효과인지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성과 중심의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과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등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 이슈 중에서도 노동, 부의 창출과 같이 많은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 외에 인권과 분배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V. 결론

사회적 책임 개념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이제 글로벌 기

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이 사실이다. 단순한 사회 공헌 차원을 벗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서, 기업을 중심으로는 사회적 책임 이행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분야에 적용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정부나 학계 스스로도 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므로 이를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도 사회적 책임 이행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기구에서 제정한 사회적 책임 준거를 정부의 정책활동에 적용하여 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을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ISO 26000이라는 사회적 책임 규격을 지방정부(울산광역시 남구)의 정책수행 활동에 적용하여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구성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회적 책임 규격들은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정부부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행히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ISO 26000은 기업, 정부 등 모든 조직을 포괄하는 규격이므로 이를 지방정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해석'하여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틀은 추후 더욱 보완하여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시 남구의 주요정책들을 ISO 26000의 규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CSR Company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분석을 위한 SR Toolkit'에 적용한 결과, 7개 핵심과제와 36개 이슈 전반에 걸쳐 사회적 책임 이행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진단되었다. 비록 이 연구는 한 지역의 사례분석에 국한되어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를 별도로 분석하고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이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더욱 더 진지하게 진행할 필요성도 발견되었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핵심주제 중 인권과 같은 분야는 이행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보호에 있어서 어느 조직보다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야할 정부가 이 분야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내부 직원의 인권 보호에 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것은 조속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요소들은 7개 핵심 주제의 여러 부분에서 발견된다.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여럿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평균적인 수준 진단에 못지 않게 ISO 26000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과 요구사항들을 지방정부에 적용하여 부족한 부분,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 고도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 지방정부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 책임 요건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흡한 면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일자리 창출 같은 분야의 경우 양적으로는 일자리의 숫자가 증가하여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 같지만 단기의 단순 노무직의 증가로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원기간 동안은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원이 끝나면 생존하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주민참여를 위한 위원회의 숫자는 많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거의 없다. 따라서 형식적, 외형적, 계량적 데이터 외에 ISO 26000이 제시하고 있는 질적인 측면의 분석준거를 통해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 또는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논의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기업에 못지않게 공공부문도 사회적 책임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요소를 정확히 식별하고, 이들이 이행되는 수준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실증적으로 진단한 최초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고동수. (2006).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국제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고동현 외 3인.(2016).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자본주의의 오래된 미래」, 한울아카데미

권주형·최호규·김진경·최재원. (2017). 사회적 경영의 개념과 영역에 대한 탐색적 연구. 「기업경영리뷰」, 8(1)

기술표준원. (2012).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

기획재정부. (2017).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김성수. (2013). 사회적 책임의 변천과정과 신 패러다임의 정립방안, 「인터넷 비즈니스연구」, Vol.14(1)

김성식·이영면. (2017),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현황 및 과제, 「중소기업연구」 39(2)

김성진. (2017).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필요성과 전망,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김정인. (2018).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직가치에 관한 시론적 연구 : 포용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김창호. (2006). ISO 26000 시행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구축방안,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3권 제2호

김철주·이상엽. (2012).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2(1)

김태영·송성수·김기룡. (2017).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대안 탐색. 「한국공공관리학보」 31(4)

김형욱. (2010), ISO 26000 국제표준제정과 이행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효율적 대응 방안 -

국내 기업에 대한 ISO 26000의 영향력 분석을 중심으로,「품질경영학회지」38(2)
라영재. (2014).「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반영 방안」한국조세재정연구원.
라영재. (2009). 공공부문 책무성의 변천과 통제방안.「한국정책연구」. 제9권 제1호
박명규·이재열 엮음. (2018).「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 한울아카데미.
박인용. (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연구.「한국정책논총」제13권
배정환. (2011).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연구,「한국지방행정학보」8(2)
송관철·이의연. (2018).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8(8)
송병준·임종헌. (2013). 유럽연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운영시스템과 정책,「경영컨설팅리뷰」제4권 제1호
울산시 남구.(2019),「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윤수정. (2018). 사회적 가치 실현과 헌법,「공법학연구」19(3)
윤태범. (2011).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과 ISO 26000,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윤태범 외. (2017).「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이강호. (2012). 사회적 책임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유라시아연구」, 제9권 제4호
이동원. (2011). 조직에 대한 사회적 책임 도입 방안, - ISO 26000의 실천지침을 중심으로,「법학논총」, 35권 1호
이장원·노한균·고동규·황상규. (2009).「사회적 책임 정책대응방안 연구-ISO26000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조선배. (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소비자인지와 소비자신뢰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외식경영연구」. 16(5)
한국행정연구원. (2018).「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방안 연구」
Bowen, H. R. (1953),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Carroll, A. B. (1979),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4, No.4, pp.497-505.
Carroll. A. B. (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 holders, *Business Horizons,* 34. 39-48
Coleman, J.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ISO. (201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Timothy. L. (1996). Religious Belief, Corporate Leadership, and Business Ethics, *American Business Law Journal,* Vol. 33. pp.451 ~ 471.))
Wartick, S. L. and P. L. Cochran. (1985), The evolution of the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mode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0, No.4, pp.758-769.
Wood, D. J. (1991),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revisited,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6, No.4, pp.691-718, 1991.
Yoo. Dong Woo, Jung, Joon Keum. (2019), Social Responsibility and Local Government: Soft

Budget Constraint and Internal Decision Making Proces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3 No.1
http://www.globalreporting.org, 2020.01.10.
http://www.iso.org, 2020.01.10.
http://www.unglobalcompact.org, 2020.01.10.

**정준금(丁俊錦)**: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학, 환경정책, 시차이론 등이다. 저서로는 정책학원론(공저), 환경정책론, 새로운 패러다임 행정학(공저) 등이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정부변동에 다른 정책변동의 사례분석", "정책연구의 경향과 과제", "Social Responsibility and Local Government: Soft Budget Constraint and Internal Decision Making Process" 등이 있다. 한국지방정부학회장(2013년)을 역임하였다(jkjung@ulsan.ac.kr).

〈논문접수일: 2020. 1. 10 / 심사개시일: 2020. 1. 14 / 심사완료일: 2020. 2. 2〉

## Abstract

# Analysis of the Level of Social Responsibility in Local Governments Based on ISO 26000: Focused on Nam-gu, Ulsan Metropolitan City

Jung, Joon Keum

The study aims to analyze and assess the level of policy activities for the social responsibilit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o this end, the concept of social values and social responsibility was first identified and the scope and contents of social responsibilities to be carried out by local governments were derived around ISO 26000. The analysis by the SR Toolkit of CSR Company, which focuses on the seven core subjects and 36 issues presented by ISO 26000, shows that the level of social responsibility fulfillment of local governments is generally good. However, details, including the human rights sector, have also been identified to be supplemented or improved.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is the first study to measure the level of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public sector.


Key Words: Social Responsibility, ISO 26000, Local Government, CSR